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28일

ISSN 1976-0507 Vol. 1 No. 9

독일경제 호조 요인과 지속가능성 분석

김 군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 ▣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병자’로 여겨졌던 독일경제가 2006년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수준의 안정과 함께 고용이 확대되고 정부 재정수지도 개선되고 있음.
- ▣ 이러한 독일경제의 부흥은 세계경기 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정부의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에 기인함.
- ▣ 그러나 최근의 호조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독일경제의 최근 현황

-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병자’로 여겨졌던 독일경제는 현재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5년간 2000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고 특히 2001~05년 5년 동안에는 연평균 0.6% 성장에 그쳤던 독일경제가 2006년에는 2.7% 성장한 것으로 잠정 추정됨.¹⁾
- 2007년 1/4분기에도 전기대비 0.6%(전년동기대비 3.6%) 성장하며 경기상승을 지속하고 있음.
- 2006년 독일의 수출은 1조 1,120억 달러를 기록해 2004년 이후 3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 2005년 0.8%에 불과했던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2006년에는 5.6%로 크게 상승하면서 독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수년간 침체에 빠져 있던 민간소비지출도 2006년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일조하고 있음.

표 1. 독일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DP	-0.2	1.2	0.9	2.7
민간소비	-0.1	0.1	0.1	0.8
정부소비	0.4	-1.3	0.6	1.8
총고정자본형성	-0.8	-0.4	0.8	5.6
수출	2.4	9.6	6.9	12.5
수입	5.4	6.9	6.5	11.1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spring)

1)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spring)

- 이러한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정부의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한편, 물가수준은 안정된 상태임.
- 2004~05년 9.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07년 4월 현재 6.7%로 떨어졌으며 이는 유로지역²⁾ 평균 실업률 7.1%와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임.
- 2002~05년에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EU의 안정성장협약(SGP)³⁾이 규정한 GDP의 3%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GDP의 1.7%로 축소됨.
- 이러한 경기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하회하는 1.7%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에도 1.9%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임.

2. 독일경제 호조의 배경

- 최근 독일경제 회복의 직접적 요인은 기업의 총고정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임.
- 즉 독일경제는 2004년 대외여건 호조에 따른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2004~05년 동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에 들어서야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함.
- 세계경기 상승,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효과, 노사간 합의에 따른 노동비용 감소, 정치적 안정에 따른 사업전망 예측 가능성 등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유로지역(Euro area)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Monetary Union)에 가입된 국가들로 구성되며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기존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이었으나 2007년 1월부터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는 13개국임.

3)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들이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하도록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에 강제하고 있음.

가. 대외경제적 요인

-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독일경제는 2004년 이후 경기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기 회복 → 수출 증가 → 기업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기계류 수출증가 및 고유가 혜택을 본 산유국들의 구매력 증가에 따른 수출확대 등 대외적 여건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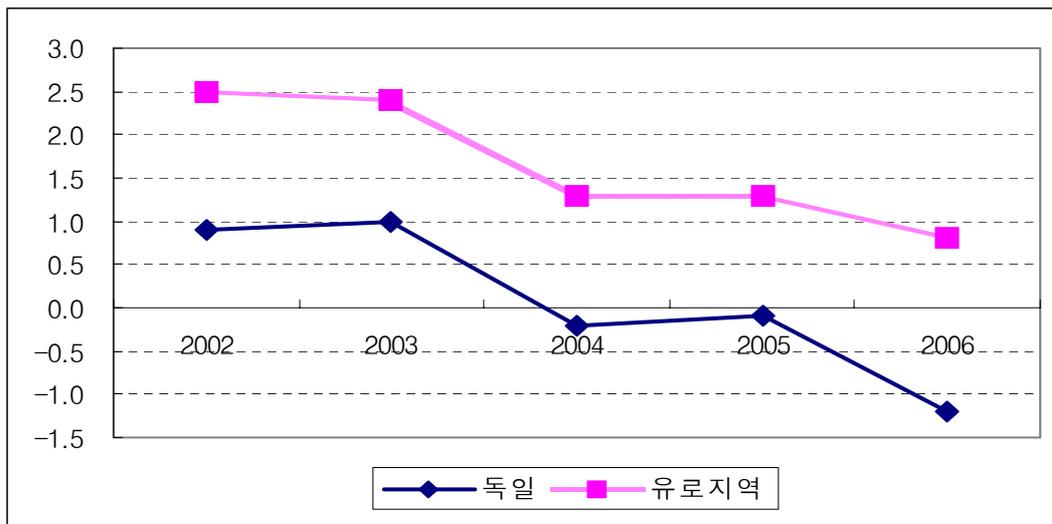
나. 구조개혁 성과

- 사민당 집권기의 슈뢰더 총리가 추진한 'Agenda 2010' 및 메르켈 총리의 취임 이후 추가된 일부 경제구조 개혁정책들이 일부 효과를 발휘함.
-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Hartz IV법」은 실업수당 지급기간 축소, 장기실업수당의 폐지 및 강제취업을 통해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메르켈 총리 취임 후 노조의 경영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정책이 추진됨.
- 2009년부터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07년 2월 2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음.
- 또한 독일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39%의 현행 법인세율 수준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이 2007년 3월 14일 하원을 통과함.

-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사간 합의 등 기업의 구조개혁 조치로 사업여건이 개선됨.
- 2004년부터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지멘스 등 주요 독일기업들이 대외경쟁력 저하, 이익감소 등을 이유로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하자, 노사 양측은 추가임금 지급 없는 근로시간 연장(주당 35 → 39 또는 40시간) 및 임금상승 억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이 감소함.
- [그림 1]에서 보듯이 독일의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유로지역 전체 평균치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음.

그림 1. 독일 및 유로지역의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다. 정치적 안정

- 2005년 총선에서 대연정 합의 이후 점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음.
-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 이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면서 대연정은 안정되고 있는 상황임.

- 2007년부터 독일이 EU 의장국 및 G8 의장국을 수입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 또한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라이벌인 기사당 당수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가 기사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금년 9월에 당수직 사임과 동시에 정계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르켈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민·기사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상승한 반면, 기민·기사당과 대연정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의 지지율은 기민당보다 뒤처짐.⁴⁾
- 따라서 현재의 기민·기사-사민당 대연정이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르켈의 안정된 경제개혁정책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3. 독일경제 호조, 지속가능한가?

- 1990년대 초 이후 독일의 잠재성장률⁵⁾ 변화를 유로지역 및 미국 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유로지역과 미국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독일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그림 2 참고).⁶⁾
- 독일의 1991~9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6%였으나 10년 후 2001~05년에는 1.1%로 크게 하락함.
- 그러나 같은 기간 유로지역은 2.3%에서 1.9%로 소폭 하락했고, 미국은 3.0%에서 변화가 없었음.

4) 금년 3월 여론조사에서 기민-사민 연립정부의 지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민당(CDU)에 대한 지지율이 36%(2007. 1. 5)에서 45%(2007. 3. 4)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사민당(SPD) 지지율은 30%(2007. 1. 5)에서 31%(2007. 3. 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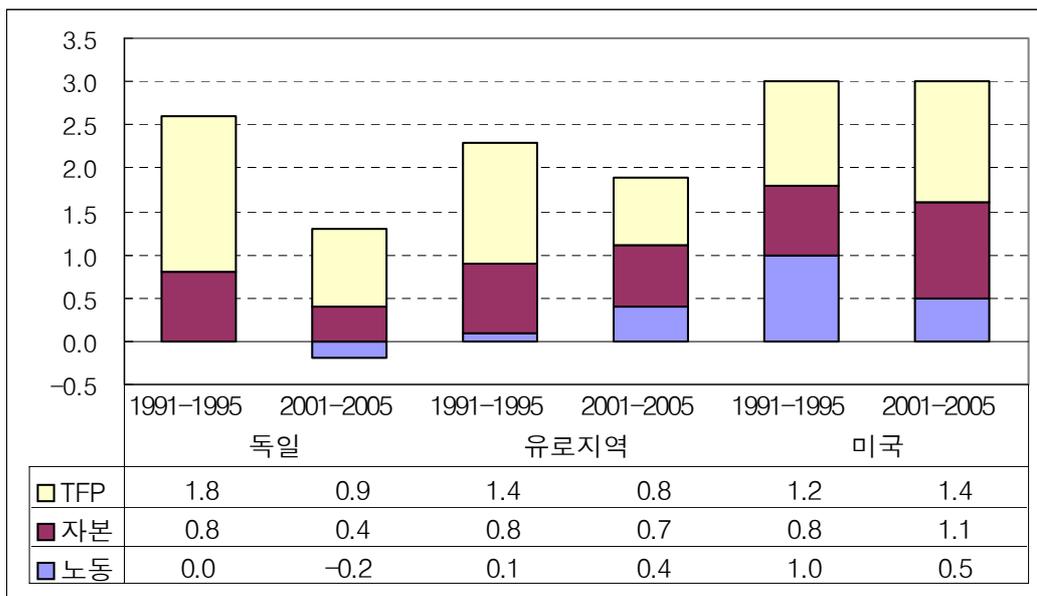
5)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함. 잠재성장률은 노동 및 자본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 등 3가지 기여도로 나누어짐.

6) 본고는 잠재성장률 분석을 통하여 독일경제 호조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잠재성장률 분석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Case Study: Raising Germany's Growth Potential." (February, 2007)을 참고한 것임.

- 독일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중 노동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로지역은 총요소생산성(TFP)의 하락을 고용증가를 통해 보완하고 있고, 미국은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 증가율이 고용증가율 하락을 보완하고 있음.
- 그러나 독일은 자본의 기여도가 10여 년 사이에 0.8%에서 0.4%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노동의 기여도는 0%에서 -0.2%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1.8%에서 0.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른 경제권과 비교해볼 때(즉 2001~05년 유로지역 0.8%, 미국 1.4%) 그나마 상대적으로 견줄 만한 수준임.

그림 2. 독일 및 기타국들과의 잠재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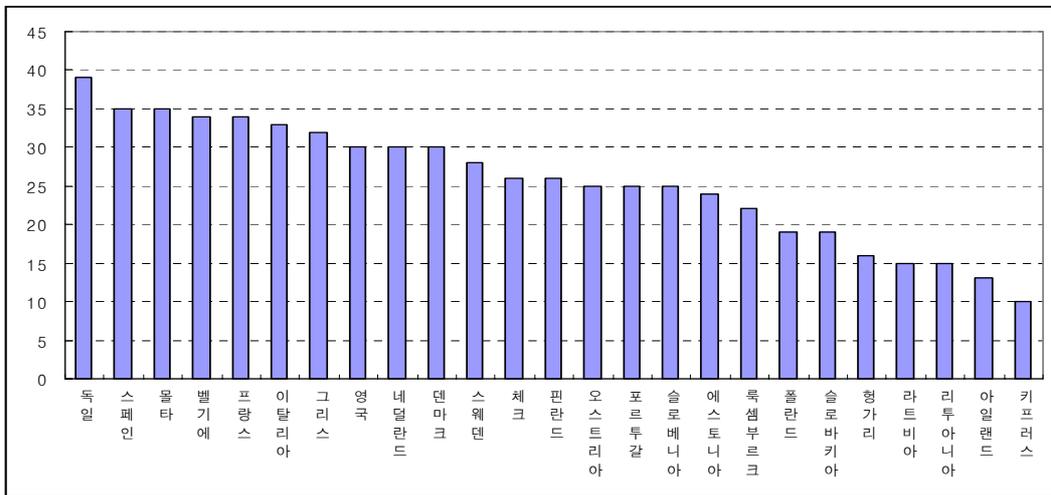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Case Study: Raising Germany's Growth Potential." (February)

- 결국 독일이 장기적으로 현재의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artz IV 등의 노동개혁정책은 장기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04년까지 독일의 실업수당은 OECD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Hartz IV로 인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들이 받는 실업수당은 최저생계비 수준(월 345유로)으로 낮아짐.⁷⁾
-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최근의 법인세 인하방안 또한 기업들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OECD의 고용보호법 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icators, EPL Indicators)⁸⁾로 평가한 독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도는 2003년 기준으로 2.2에 해당되어 프랑스(3.0)보다는 낮지만 덴마크(1.4), 영국(0.7), 한국(2.0)보다는 높은 수준임.
- 2006년 기준 독일의 법인세율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9%였으나 2008년까지 30% 이하로 인하될 예정임.

그림 3. 2006년 EU 회원국별 법인세율 현황

(단위: %)



주: IDA(2006), Ireland Vital Statistics, (September)

7) 2004년 기준, 60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독일의 순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급여의 73%로 OECD 평균치 57%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음. 여기서, 순대체율이란 실업자가 받는 각종 수당을 실업 직전에 받던 급여로 나눈 비율을 말함.

8) EPL 지수는 고용보호법의 정도에 따라 0~6으로 분류됨. 즉 '0'이 고용보호법의 정도가 가장 약하고 '6'이 가장 강함.

- 또한 자본축적과 투자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도 필요함.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국내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됨.
-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2005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62억 달러(2003년) → 19억 달러(2004년) → 456억 달러(2005년)
-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독일기업들이 신상품 개발보다는 비용절감 측면에 치중해 있었으며,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전통적인 산업부문은 강한 반면,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⁹⁾
- [표 2]와 같이 2006년 제조업부문의 총부가가치는 2000년에 비하여 약 13.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도소매 및 운송 부문(10.1%),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9.2%), 기타 서비스(2.9%) 등 서비스부문의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제조업에 비하여 저조한 성적을 거둬.

표 2. 독일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변화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제조업		103.8	107.2	113.4
서비스업	도소매 및 운송	105.1	106.5	110.1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106.1	107.3	109.2
	기타 서비스	102.5	102.5	102.9
전산업		103.4	104.5	107.3

주: 2000년을 기준(100)으로 함.

자료: 독일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Germany).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강도 높은 개혁정책들이 향후에도 계속 실행된다면 2006년의 잠재성장률(1.3%)이 향후 10여 년간 EU 경제성장률 평균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

9) Jansen, Heinz and Michael H. Stierle(2007), "Upswing in Germany: how long will it last?," *ECOFIN Country Focus*.(April)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독일경제의 부흥은 세계경기 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정부의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에 기인함.
- 기업들의 투자확대는 고용을 증가시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민간소비까지 살아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독일의 경기확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대외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해 투자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